전통시장 카드 수수료 2%대 인하

중기청·상인연합, BC카드와 MOU… 대형마트 수준인 2.0~2.5%로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는 BC카드와 전통시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현행 2.7~4.2%로 대형마트(2.0~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통시장 카드수수료가 BC카드의 경우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기청은 올해 BC카드와 시범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뒤 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외환 등 다른 카드사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41.5%에 불과한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률을 2012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에서도 BC카드 TOP포인트를 적립,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해 전통시장 카드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카드수납을 전국 1천550개 전통시장의 약 21만 점포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까지 전통시장 카드 단말기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비씨카드의 목표다.

작년 말 기준 전통시장의 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46.4% 수준이다.

중기청 하종성 시장개선과장은 "이번 합의로 전통시장 상인의 카드 수수료를 연 간 370억 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나눔사랑' 11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애육원에서 애육권 관계자와 아시아나항공사 관계자들이 '색동 어린이 놀이터' 개장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애육원은 그동안 놀이터가 없었으나 최근 아시아나 항공이 2천만원을 후원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술도 품질분석 결과 공개

국세청, 안전성 확보 추진… 주류업계 파장 예상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주류업계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질(酒質) 분석 결과는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지만 이번에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최근 보낸 서면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듯이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 술은 주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질 분석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주류 종류와 업체명이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비공개로 시행된다.

이는 주질 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반 내용이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것과 무관하게 알코올도수 위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이며 모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5년에는 분석건수(1천17건)의 14.1%(143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로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마시는 술이 주질 분석 결과 문제가 발견돼 제조·출고 정지를 당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유통 중인 술을 사 마시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생산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질 분석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30일까지

대상자 100만명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이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50%다.

이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한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연합뉴스

전남 중견 건설사 세무조사

탈루 혐의… 서울국세청 조사 4국 투입

국세청이 지방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서울에 있는 건설사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서울청 조사4국이 전남지역 건설업체 2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 지역의 건설사 한곳도 관할 지방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남지역 건설사들은 심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 토호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2004년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사는 5년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상시로 전국 107개 세무서에서 지역 토호기업 중 정치권력에 편승, 청탁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부도덕한 토착기업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벌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토호기업에 대한 조사는 상시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 청사 한옥으로 짓는다

한옥 스타일의 공공청사와 한옥마을이 조성되는 등 한옥 보급이 활성화되고, 신도시·산업단지 등에는 통합 건축디자인이 도입된다.

또 공공부문이 짓는 아파트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11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개념의 국가계획으로, 이번에 처음 수립되는 1차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국토환경 디자인 강화 ▲건축·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 ▲녹색건축·도시 구현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역량강화 및 글로벌 확산이라는 6대 핵심 추진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한옥 및 한옥 스타일 공동주택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합뉴스